

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6. 27(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7일

전문위원 장 석 현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57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3년 6월 1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례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고,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의무 이수 조항 삭제(안 제7조, 제9조)
- 나. 위원 추천 비율 조항 삭제(안 제8조)
- 다.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에 사익 추구 금지 조항 신설(안 제11조)
- 라.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중임 제한 규정 추가(안 제14조)
- 마.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추가, 분과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안 제18조)

바.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추가(안 제19조)

사.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중 감사 삭제, 임원 중임 제한 규정(안 제26조)

아.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횟수 조정(안 제2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제29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2. 24. ~ 2023. 3. 16.) 결과: 의견 있음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3항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하는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로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현장 여건 반영 (접수된 의견 전부 수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

- 제8조(위원의 위촉) 제2항 ‘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 는 규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정해진 순위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개선요구 (개선의견 전부 수용)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내실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7조 및 제9조는 주민자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 또는 연임 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안 제8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하게 하는 “위원 구성 비율”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위촉이 가능하게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하여 예비자 선정은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하여 위촉의 투명성을 강화함

1) 주민자치학교

가. 내 용: 강서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또는 연임에 필요한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나. 대 상: 전동 주민자치회 위원
 다. 세부 교육내용: 총 6시간

구분	세부 강의 내용	비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주민자체 제도 역사 및 제도적 특징 등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필요성 및 주요 문제 등	

- 안 제11조는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 관련 강행규정(“하여야 하며”)을 임의규정(“할 수 있으며”)으로 변경하여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12조는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하는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현장 운영 여건을 반영하였음
- 안 제14조는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존 자치(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²⁾이 가능한 것에서 한 차례만 중임³⁾이 가능하게 변경하고 중임 관련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8조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실용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음

2) 연임: 정해진 임기가 끝난 후 다시 계속하여 선거에서 선출되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3) 중임: 직위나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의미하며, 중임을 제한할 경우 다시는 그 직책을 맡을 수 없음

- 안 제19조는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등 연 1회 「주민총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동별 주민자치회 관련 결정 권한을 강화하였음
- 안 제26조 및 제28조는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관련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임기를 정비하는 등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개선함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동별 운영여건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원 위촉 시 획일적인 “위원 구성 비율”을 삭제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별 결정권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애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김 성 태

(담당: 행정7급 김은정 / ☎ 2600-6159)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전부수용)

현행	의견제출
<p>제12조(위원의 해촉)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u>재적위원 3분의 2</u>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p>	<p>현재 우리 화곡4동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은 44명으로 3분의 2 이상은 약 30명인데 30명의 위원이 정기회의 등에 참석하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음</p> <p>주민자치회 2기가 실시된 이후 위촉장도 찾아가지 않는 불참 위원들이 있는데 사퇴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상태임</p> <p>이러한 위원들을 정기회의에 불참 사유로 위촉해제를 하려고 하나 오지 않는 위원들 당일 사유로 인하여 불참하는 위원들을 포함하면 위촉해제 요구 또한 마땅치가 않은 상황임</p> <p>불참하지 않는 위원들의 재적위원 등록으로 인하여 정기회의 개최 및 분과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존재함</p> <p>따라서 조례 <u>재적위원 3분의 2 조항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추가하여</u> 위원의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위원의 위촉해제를 통한 원활한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었으면 함</p>

붙임3**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전부 수용)**

입안부서	부패영향평가 대상	검토결과	조치사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위원의 위촉) 제2항과 관련하여 예비자 순위 선정 시 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 기준을 두어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개 추첨결과에 따라 정해진 순위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 요구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